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에 대한 의견서

양형위원회가 2025년 1월 13일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1. 가해자의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은 성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권력관계, 피해자 비난, 강간 통념, 성차별적 인식,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 등이 해아려지고 반영되어 정의가 실현되리라 기대되는 장입니다. 수사·재판과정은 진술과 증거수집, 구성요건 충족 등을 우선 따지는 절차지만, 법원의 재판은 실제적 진실, 맥락에 대한 주장(해석), 당사자와 증인의 신빙성, 발생한 피해 정도, 처벌을 바라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양형기준은 형량, 형종 뿐 아니라 양형인자와 정의 규정을 통해 재판에 스며든 낡은 관습과 관념을 배격하는 것, 설득력 있는 선고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 사건을 직접 조력하고 모니터링하는 피해자 지원기관·시민단체는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이 정식화된 이래로 성폭력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과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양한 의견으로 제출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요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감경을 적용받기 위해 성범죄 피고인은 반성문 대필 사이트를 통해 유료 반성문을 생성해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성폭력상담소 등 기관에 후원금을 납부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가 판결 이후 환불을 받는 식의 ‘꼼수 반성’을 하는 행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부추기는 변론 시장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아려 2022년 3월 진지한 반성에 대한 기준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양형기준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선고를 낮추기 위한 갖가지 꼼수로 등장하는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공판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진행 상황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범죄 피해자의 사정과 여건을 해아리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여덟 번째 성범죄 양형기준 변경을 위한 과정도 그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2.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1) 공탁 삭제 및 ‘상당한 피해회복’

기존 안의 위치	수정 의견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정안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 “실질적 피해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마. 통신매체이용음란 2.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3. 그 외 양형기준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정안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 <u>삭제</u>

이유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에는 공탁이 양형인자에서 삭제됨. 그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 액수가 형량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성폭력 피해 현장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이 곧 '피해 회복'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었음. 공탁법 개정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반영한 결과로써, 환영하는 바임.

현재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그 외 양형기준에서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공탁이 삭제되는 방향이 필요함.

다만 감경인자에 ‘처벌불원’이 있는데 이와 별개로, ‘상당한 피해회복’이라는 감경인자 자체가 모호한 면이 있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감경인자를 두고 정의 규정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로 두고 있음. 이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피보호, 피감독자 간음(19세 이상)

기존 안의 위치	수정 의견
다.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수정안의 “양형기준 형량기준”을 - 강화

이유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에 대한 형량 기준이 지나치게 낮음.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첨부된 7년 이하 유사 범죄 중 성폭력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음.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에 대한 이제까지 선고형의 범위가 2년 이하에 해당했다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기 때문이었으므로, 형량기준을 높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형기준 수정안은 피보호 피감독자 간음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고, 의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권고 형량 범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음. 그러나 의제추행의 경우,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훨씬 낮은 형량을 두고 있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의제추행과 피보호 피감독자 간음 사이에 양형 차등을 입법자의 의도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굳이 비교하자면 행위 태양이 유사한 의제간음과 비교하여야 옳고, 의제 간음보다 기준이 낮으면 될 일인데 의제추행보다 낮은 기준을 설정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3) 양형인자 및 정의 관련

(1)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용어 변경

기존 안의 위치	수정 의견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 다.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 상 의제강간 등 포함) 마. 균형법상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 주요참작사유 > 재범의	수정안의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를 - 삭제하거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로 통합 - 양형인자 정의 내용 전면 수정

위험성 등 > 부정적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

이유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 변경에서는 간음, 강간 범죄 양형인자에 있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를 ‘극도의 성적 불쾌감’ 중대로 변경하였음. 이는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을 제3자가 보수적으로 규정하는 규범화된 감정을 기준 삼지 말고, 피해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존엄한 상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였지만, ‘가학적, 변태적 침해 행위’ 용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

현재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는 피해자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상규상 규범성을 일탈하는 성적 행위를 제3자가 규정하고 있음. 이를 폐기하거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2) “윤간” 용어 변경

기존 안의 위치	수정 의견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3, 4유형) 다.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2, 4, 6유형)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 상 의제강간 등 포함) (2, 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집행유예기준 : 주요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부정적	수정안의 “윤간”을 - “집단 범행”으로 변경 - 일부 유형에만 제한한 것을 해제

이유

간음, 강간 범죄 양형인자에는 ‘윤간’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집단 성폭력 중에

셔도 집단 강간의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한자로 표현한 단어인데,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가해행위를 집단으로 모의하고 실행한 것이지 범행의 구체적인 장면에 대한 묘사가 아님. 해당 용어를 성범죄 행위를 묘사하는데 기능하고 있으며, 폭력을 선정적으로 뒤바꾸는 표현물에서 자주 사용됨.

“집단 범행” 등으로 용어를 수정해야 하며, 집단성을 가중요소로 산정한다면 이는 강간, 간음에만 해당되지 않음.

(3) “2차 피해 야기”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문구 삭제

기존 안의 위치	수정 의견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 다.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 상 의제강간 등 포함) 마. 균형법상 성범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러. 2차 피해 야기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 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 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 정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을 - <u>삭제</u>

이유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정의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라고 서술됨. 이는 성범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피해자와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던 피고인, 피의자와 가족들의 행태가 큰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양형요인에 반영

했던 과정이었음.

그러나 현재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식화되어 있지 않고, 현재 2차 피해는 합의 시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증인신문에 나가지 못 하게 하거나, 피해자 증인신문 전후에 다른 죄목으로 피해자를 역고소하여 압박하거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수법과 상황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이라는 구절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4) 집행유예 사유에서 “사회적 유대관계” 삭제

기존 안의 위치	수정 의견
II. 집행유예 기준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집행유예기준 : 일반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기준 : 일반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긍정적	수정안의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을 - 삭제

이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것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것임.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성폭력에서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재하지 않고 방면하는 것임.

의대생이라는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집행유예 대상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계층은 재범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기보다 사회적 지위와 자원을 보유할수록 성폭력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은 이들 계층에 대한 신고나 처벌 의사 유지를 두려워하는 결과로 이어짐.

(5) “동종전과”의 범위

기존 안의 위치	수정 의견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양형인자 정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를

더.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삭제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정의에 - “동종전과” 추가

이유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동종전과 정의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때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에는 디지털성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 성매매범죄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는 크게는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그 외의 사회적 약자, 집단 내 취약한 사람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복합적인 범죄 모의부터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비교하여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동종누범은 성범죄, 성매매범죄를 포함하고 있고,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에서 동종누범은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음. 반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동종전과에 대한 정의가 없음. 보완이 필요함.

(6) 비난 동기에서 “피해자가 소속된 동질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감” 추가

기존 안의 위치	수정 의견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타.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 정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 “ <u>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 혹은 피해자의 동질 집단에 대한 혐오 혹은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u> ”로 변경

이유

최근 신림동 성폭력 살해사건,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 등 여성혐오를 표명, 표현하며, 그러한 사상에 기반하여 특정 집단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

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모방범죄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현행 양형인자 중에서는 "비난 동기"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유사하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이 아닌 피해자가 소속된 동질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 범죄의 경우와는 전혀 다름.

비난 동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 혹은 피해자의 동질 집단에 대한 혐오 혹은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추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